

2019년 상반기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49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

- 문화/환경/안전/주택/교육/기술/교통/마을/정보/관광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년 상반기(Vol.49)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김영현, 송유미, 유예슬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9년 상반기(Vol.49)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

2 Hot Topic 10

4 지역별 Hot Topic 포커스

건축·도시 분야 Updates

8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1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1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34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배포한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정책키워드를 추출합니다. 'Hot Topic'에서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현안을 알아 볼 수 있는 핵심키워드를 소개합니다.



2019년 상반기 정책보도자료 분석 결과 '환경', '기술' 관련 키워드가 다수 나타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2019년 1월~6월) 1,712건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문화', '환경', '안전', '주택', '교육', '기술', '교통', '마을', '정보', '관광'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나 Hot Topic 10으로 선정됐다. 이어 '서비스', '도로', '에너지', '스마트', '산림', '참여', '도시재생', '체험', '생태', '전시', '경제', '나무', '창업', '자원', '청년', '사고', '프로그램', '주차', '역사', '노후', '어린이', '시스템', '미세먼지'가 비교적 높은 빈도(100이상)를 나타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환경', '산림', '생태', '나무',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키워드**와 '기술', '정보', '스마트', '프로그램', '시스템' 등 **기술 관련 키워드**가 높은 순위권에 올랐다.

지역별 Hot Topic 포커스



지역별 Hot Topic 포커스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상반기(1월~6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추진

도시재생정책과, 2019.01.02.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멸종위기종 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2019.01.07.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km²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담비 및 삥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 및 II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9.01.08.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건축정책과, 2019.01.14.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 기준은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하는 등 환경변화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균발위·산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2019.01.2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등이 있으며,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화재예방과, 2019.01.24.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금년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9.02.01.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관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관한 확대,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등이다.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간선도로과, 2019.02.10.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하였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푸른하늘기획과, 2019.02.15.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①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③ 취약계층 보호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행안부, 펜션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전기획과, 2019.03.14.



행정안전부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미세먼지개선기획단, 2019.03.20.



환경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며, 새로 제정한 법률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번 제·개정으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도시경제과, 2019.04.0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 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겨있다.

개정내용은 국가 시범도시 지원에 ① 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 ②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 확대, ③ 신산업 특례 3종 도입이 있으며, 기존도시 지원에 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면적제한 삭제, ② 민간 제안제도 신설, ③ 정책일반 지원이 있다.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택정비과, 2019.04.05.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②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선, ③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 확대이다.

조달청,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시설사업기획과, 2019.04.09.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으로 설계비 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 ②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③획일적 공공건축물 탈피를 위한 설계공모 디자인평가 신설이며, 이 기준은 2019년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위해 960억 원 추경안 편성

철도시설안전과, 2019.05.24.



올해 7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 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지역균형발전과, 2019.02.07.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번 계획 변경은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 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산림청, 「나무 심기 추진계획」 발표

2019.02.20.



산림청은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만1000ha에 5천만 그루를 심는 '2019년도 나무 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나무 심기로 하나 되는 한반도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2000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4000ha,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쌈지숲 110개소, 가로수 596km, 학교 명상숲 96개소, 무궁화 동산 17개소 등 쾌적한 녹색 생활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휴식·치유를 돕는다. 또한 나무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도시정책과, 2019.03.13.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광역도시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연구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축안전팀' 신설로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건축정책과, 2019.03.18.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 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건축안전팀은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 관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국내 최장거리 도보탐방로 ‘남파랑길’ 사업계획 발표

국내관광진흥과, 2019.03.25.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에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두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km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으로 구성되었다.

행안부, 대국민참여로 ‘DMZ 평화의길’ 동서횡단 구간 조사

지역균형발전과, 2019.06.05.



행정안전부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의길’ 동서횡단 구간 노선 조사 단계에 대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DMZ 평화의길’ 동서횡단 구간 약 501km를 연결하고, 시군별 거점센터 10개소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노선을 경유하는 지자체는 각각 ‘주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자체 노선(안)을 설정하고, ‘노선조사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참여자들이 직접 길 조성 과정을 SNS와 유튜브 등에 공유하고 주변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스토리 및 미담 등에 직접 참여·발굴하는 대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승인

공공주택추진단, 2019.01.09.



국토교통부는 2018년 도심에 위치한 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 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활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접수

녹색건축과, 2019.01.14.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이 추진되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시행

도시경제과, 2019.01.15.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하여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서,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사업 기획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 방안 마련

경찰민원과, 2019.01.16.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CCTV, 방범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2년간 발생한 각종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결정한 후, 해당 지점별로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지역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어린이, 여성, 노인 등 국민들이 늦은 밤 귀갓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지역개발과, 2019.01.16.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추진

지역정책과, 2019.01.16.



도시
정책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 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지구 조성

첨단자동차기술과, 2019.01.17.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노변센서, V2X 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C-ITS)가 구축되며, 고정밀지도, 차량정비·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및 휴게·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제공된다. 특히, V2X 구현을 위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정기 도로통제 등을 통해 실제도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교육부,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2019.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① 기초·원천, ② 통합시스템 구축,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국토부·법무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19.01.30.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 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도시경제과 2019.02.08.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가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02.14.



주택
정책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403억 원→2,670억 원)크게 증가하면서 동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하였다.

* 변경내용

- 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 ②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 ③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국토부, 지역 밀착·수요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추진

민간임대정책과, 2019.02.19.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용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공공 유허·저활용 공간을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주민참여협업과, 2019.02.19.



행정안전부는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 및 운영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추진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각 시·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초년도의 사업정착을 위해 정부가 5.1억 원, 17개 시도별로 최소 5.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173.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건축정책과, 2019.02.25.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10선 발표

국내관광진흥과, 2019.03.12.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10선을 발표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후 선정된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양구의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곡성의 '섬진강침실습지, 마법의 아침여행', 고양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양평의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성주의 '500년 왕버들숲으로 떠나는 생명여행', 창원의 '편백숲 욕(浴) 먹는 여행', 부산 금정의 '도시가 품은 섬,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함안의 '악양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 피크닉' 등이다.

문체부, ‘스마트 경기장’ 조성 지원

스포츠산업과, 2019.03.29.



건축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수원KT위즈파크, 창원 NC파크마산구장 2개소의 ‘스마트 경기장’ 조성을 지원한다. ‘스마트 경기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관중에게 다시점 중계와 실시간 경기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단이 고객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상황 관리대처(재난 대피 등)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한다. ‘스마트 경기장’ 2개소 지원은 ’18년 스마트 경기장 구축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각 국고 6억 6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

도시활력지원과, 2019.03.31.



도시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지구로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 102개소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과기정통부·산자부·행안부,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2019.04.01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로상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처리·통신 플랫폼(과기정통부), 멀티센서 융합 도로조명 시스템(산자부), 도시재난안전관리 연계기술(행안부) 등 부처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9.04.01.



국토교통부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은 20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이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세종시·LH, 시민이 도출한 도시 불편사항 해소 위한 실증사업 본격 추진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04.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 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범사업에서 시민들이 도출한 도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단 구성과 시민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19.2~3월)와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4월부터 10월까지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 23년까지 1.4조원 투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9.04.08.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12.19)에서 결정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하였다.

산자부, 스마트산업 산학연네트워크

‘스마트 미니클러스터’ 신규 구축

입지총괄과, 2019.04.10.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산업 산학연네트워크 14개를 신규로 구축했다.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입주 기업 200개사를 포함, 총 340개의 산·학·연이 참여하였다. 분야별로는 자동차부품 4개, 전자·전자 3개, 기계 2개, 뿌리산업 2개, 정밀화학 2개, 조선 1개가 구축되었고, 지역별로는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창원(4개)과 반월시화 국가산단(3개)에서 7개, 서울(서울디지털), 부산(녹산·신평), 충청(천안·아산), 전북(군산·익산), 강원(북평·문막·동화) 등 전국 주요 산단에 각 1개씩 구축되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건축혁신지원팀, 2019.04.18.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제75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선정

녹색건축과, 2019.04.22.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이 선도하여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민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정동극장, 국립외교원 등 23개소를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시설로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외교관, 교육생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재실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 지자체 선정

공공서비스혁신과, 2019.05.01.



행정안전부는 회의실, 대강당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될 14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의 주요 특징은 문화·여가 생활 등을 향유하기 어려운 읍·면·동 단위에서 공공청사를 유휴시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점이 꼽힌다. 아울러,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위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스쿨버스 승·하차 장소로 활용되는 소방서의 주차 공간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환경부,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대상 대학 선정

신기후체제대응팀, 2019.05.03.



환경부는 친환경 교정 조성 등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서울대, 신한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대학당 연간 4,000만 원씩 3년간 지원했던 사업비를 늘려 올해부터 대학당 연간 1억 2,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매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대학은 포상하며, 한국환경공단은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그린캠퍼스로 선정되어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친환경 교정 조성, 미래 친환경 인재 양성, 친환경 문화 확산 등 연차별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생활공간정책과, 2019.05.07.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이다. 선정된 사업의 실효성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협약 체결

생활공간정책과, 2019.05.08.



건축
정책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지자체(서울 성북구, 부산 남구, 대전 서구, 울주군, 광명시, 의정부시, 횡성군, 아산시, 예산군, 포항시, 영덕군)를 발표하고 경찰청, 해당 자치단체, 한국셰프테드학회와 함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향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 선정

건축문화경관과, 2019.05.13.



건축
정책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총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들은 한옥설계 전문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3개소,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소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6월부터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도시재생과, 2019.05.15.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주)KCC, (주)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지자체·LH·SH,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2019.05.2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중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서울특별시와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화재안전 성능 강화 위한 ‘주택성능보강 용자사업’ 시행

건축안전팀, 2019.05.23.



‘주택성능보강 용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용자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였다.

국토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지 선정

산업입지정책과, 2019.05.27.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군산, 대구, 동해, 정읍,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 효율적 개편,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산단은 앞으로 국비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허가 등 다양한 특례 지원을 받는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단위 재정비에 나서고 산업부는 공장 재건축, 휴폐업 부지 활용, 펀드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맡게 된다.

조달청,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건축설비과, 2019.01.02.



건축
정책

공공 건축사업 초기 합리적인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인 '공사비 정보광장'을 1월 2일 시범 개통했다. '공사비 정보광장'의 주요 서비스로는 크게 예상 공사비 산정, 유사 공사 검색, 공사비 관련 주요 통계 정보 제공이 있다.

환경부, 생태정보포털 '에코뱅크' 구축

국립생태원, 2019.02.28.



환경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포털시스템 '에코뱅크'를 구축하고,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에코뱅크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계 정밀조사, 생태·자연도 등 국립생태원에서 조사·연구한 생태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생태계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담아낸 시스템이다. 에코뱅크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국립생태원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생산된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의 생태정보들을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행안부, 중앙-지방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국가-지역 정책e음' 운영

자치행정과, 2019.03.1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국가-지역 정책e음'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망 내에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건의마당'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답변도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소통마당'을 활용할 경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농진청,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전국 농촌 공간정보 구축

농촌환경자원과, 2019.03.25.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의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 서비스 공간 정보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과 군사 보호지역을 제외한 3만 4,196개 농촌마을의 생필품 구매·보육·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간에 대한 정보다.

*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을 위한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30분]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60분]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

행안부,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행

산업교통재난대응과, 2019.04.23.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는 정체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체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즉각 표출되는 방식이다. 전방 도로 정체상황을 운전자에게 음성, 경고음 등 청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졸음 운전자에 대한 각성 효과와 더불어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도시공간건축과, 2019.05.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단독주택 예비 건축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정리하여 한 번에 안내하는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약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연구 과제를 두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내용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